

지방시대 매거진

Vol 122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Vol
122

2024. 10

지방시대 매거진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제122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Vol. 122

2024. 10.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2024년 역점과제

- ▶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 ‘바이오’
- ▶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정보

-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 ▶ 정동진 해돋이 축제
- ▶ 신비한 자연과 역사이팅이 만나는 곳! 무릉별 유천지
- ▶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사례

-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의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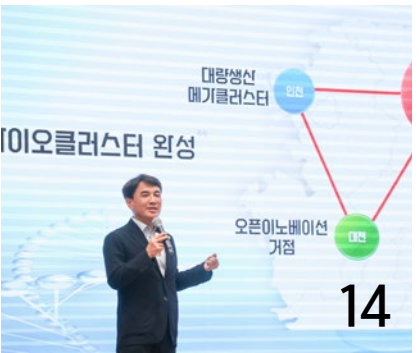
- ▶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하반기 출범식
-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국제 교류 재개
-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유튜브 개설
- ▶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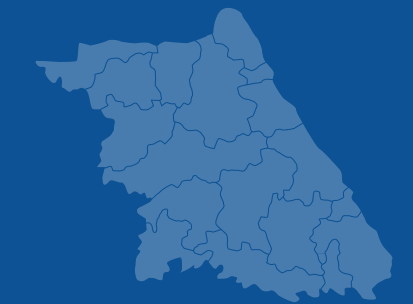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바디텍메드(주) 최의열 대표

정책포커스

- ▶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
-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시도지사 칼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최초의 풀뿌리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대에 합류하며 3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62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해 6월 9일 오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이 개최되었고尹 대통령과 함께 강원을 빛낸 인물, 기관·단체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尹 대통령은 “강원이 스스로 규제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드렸다.”며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환영하며 “이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대통령이 직접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22년 5월 29일「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23개 조항의 선언적 조항만 포함되었다. 이후 우리 도의 미래 비전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그 거리만해도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며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무산됐고 이에 더 이상의 희생을 두고볼 수 없었던 도민과 함께 상경하여 국회에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했고 결국 23일 밤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며 단 2일 만에 국회 행안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며 84개 조항을 담은 강원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50년의 숙원을 담아 300만 도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열어낸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의

주민의 힘으로 2차 개정을 완료한 강원특별법은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규제를 일부 걷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환경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환경보전제도 신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을 마련했고 산림분야에서 산림이용지구를 신설하여 강원자치도만의 토지이용·보전제도를 신설해 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산악관광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 국방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軍 공급 지원에 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고 미활용 군용지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권한도 일부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지분야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설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과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도로 이양받았다. 또한 특화 산업과 자치분권 분야에서도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 가능토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였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와 동해항 자유무역지정 완화에 이어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초·중등교육 운영에 대한 특례를 이양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민선8기 도정의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부터 도정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조직과 인사 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4대 혁신이다. 먼저 지난 2년간 도정을 운영하는 동안 단 2명의 인원만 증가한 채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세계산림엑스포,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냈다. 늘어난 2자리도 새롭게 만들어낸 영동권 강원특별자치도청 2청사 본부장 자리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자리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늘어나는 업무로 부서별로 인력증원 요청도 많았지만 효율적 인력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도정 전반에 확산시켰다. 두 번째로 무조건 아껴쓰는 것이 아니라 아낄 땐 아끼고 쓸땐 쓴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해 임기 초반 3,500억 원의 빚을 갚았으나, 이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부득이 내부기금을 활용하며 1,500억 원의 빚을 줄여냈다. 세 번째는 규제혁신이다. 강원특별법에 담긴 규제 외에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폐기물 취급받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41년 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착공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70회를 넘는 기자간담회와 언론브리핑, 원팀간담회, 현장토론회, 강원특별법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소통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소통혁신이 도민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평가도 지속 상승(5월 48.1%→6월 48.5%→7월 52.4%)하고 있으며 정당 지표 상대지수도 103.8점에 달한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를 영동권에 설치하였으며, 각종 규제 41년간 표류하며 규제의 아이콘처럼 불리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착공했다. 이 모든것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주어지기 전의 일이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추진한 도정 혁신에 강원특별법에 부여된 규제혁신을 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걸어갈 길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테스트베드다. 현재 대한민국은 4개의 특별자치도가 존재한다. 그 중 제주도와 세종시는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행정수도라는 목적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주민 스스로 자유와 권한을 요구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의 사례다. 그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떡을 더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절구와 공이를 주는 것이다. 지역에게 스스로의 먹고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주었을 때 그 효과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했을 때보다 더욱 나은 경제적 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이다. 단순히 우리 도민 잘먹고 잘살자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먹거리를 찾아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지방에 주어진 자유와 권한이 창조와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 발전하고 17개 모든 시도가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양강 댐 수몰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탄광 사고로 4,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광부의 희생이 없었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평생을 군사 규제 속에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늘 희생하며 양보해왔지만,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24년 역점과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 '바이오'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 '바이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경제는 연간 10%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급부상하며 글로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의약품을 보건안보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역량 강화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2의 반도체이자 미래경제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바이오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천명하였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

강원특별자치도는 1995년 지자체 최초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민선 8기 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 실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GRDP 100조 원 시대를 꿈꾸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바이오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제1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고,尹대통령은 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에서 강원을 바이오·디지털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춘천권의 진단·예방·의약 분야, 원주권의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홍천권의 항체약품 분야, 강릉·동해안권의 천연물·해양 분야, 접경지역권의 소재 분야, 남부내륙권의 실증 등으로 구분해 권역별 특화분야를 육성·연계하여 시·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된 데 이어 기업혁신파크에 지정되었으며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까지 선정되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3종 세트를 완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여기에 원주 디지털헬스·의료기기, 강릉 천연물 바이오, 평창 그린바이오 세 지역 및 분야를 연계하는 강원 바이오 3+3 전략을 추진하여 인천-강원-대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K-바이오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중 강원은 A신약개발과 중소형CDMO를 담당하는 연구기지 역할을 통해 대량생산 메가클러스터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있는 인천과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선의의 경쟁과 함께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강원 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전국 5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도내 오픈이노베이션과 분업화를 통해 바이오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것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지원해 나갈 것을 밝히며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와 시군, 혁신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설립하여 특화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정부 정책 연계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감자만 팔던 지역이 아니다. 강원 바이오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당당하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실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우선 전략산업인 바이오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충분히 동참할만한 실력을 갖췄고 이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30년 전 바이오 산업을 시작하며 바이오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자 했던 선배님들의 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선도하는 대한민국판 보스턴을 꿈꾸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정보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정동진 해돋이 축제

신비한 자연과 역사이팅이 만나는 곳! 무릉별 유천지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강원특별자치도 주최의 유일한 국제 시각예술 행사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가 지난 9월 26일 개막했다.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이라는 주제로 22개국 77개 팀 8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스트리아 쿤틀러하우스 특별전, 서칭 포 아티스트 인 평창, 강원작가 메타버스전 등이 동시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외 심포지엄과 세계인의 음악 등 다채로운 사전행사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강원트리엔날레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3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지역을 순회하는 강원특별자치도형 순회형 시각예술 축제다.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는 '예술의 고원, 평창'을 대주제로 2022년부터 진행된 강원트리엔날레 행사의 3차년도 완결판으로, 2022년 강원작가, 2023년 강원키즈에 이어 올해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의 주제인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Ecological Art from the Beneath)'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이며 덜 위계적인 형태로 지하, 흙,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의미하며 생태예술은 형태가 아닌 태도'라는 가치 아래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생태계 안의 비가시적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심을 예술적 실천으로 구현함을 목표로 기후위기사대 지구의 환풍구라 불리는 '개미굴'에서 영감을 얻은 전시 개념을 바탕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전시를 실현하면서도 대안적이고 타자 중심의 태도와 사고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 본행사는 '아래로부터'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메인홀)를 중심으로 '공간을 가르며'(파빌리온), '창조적 유연성'(진부 공공형 실내놀이터), '그녀의 디지털 자연'(게이트볼장/월정사 대법륜전), '방에서 밖으로'(진부시장 일대) 등 5개 섹션으로 구분하여 개최중이며 평창 스페이스 창공에서 '오스트리아 쿤틀러하우스 특별전'과 '서칭 포 아티스트 in 평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 〉

주제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 Ecological Art from Beneath

행사일정 9. 26.(목) ~ 10. 27.(일)/ 32일간/매주 월,화 휴무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일원, 월정사, 진부시장, 스페이스 창공, 컨템포러리룩, 진부 공공실내놀이터, 강원대학교 미술관

참여작가 22개국 77팀(85명) 200여점

주최/주관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2024



강원트리엔날레
GANGWON TRIENNALES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4
09.26 - 10.27
IN PYEONGCHANG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

ECOLOGICAL ART FROM BENEATH

주최 주관
HOST ORGANIZER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특별자치도
PYEONGCHANG
강원문화재단
GANGWON CULTURE FOUNDATION



정동진 해돋이 축제

정동진해돋이축제는 대표적인 강릉 일출명소인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에서 매년 12월 31일 저녁부터 다음해 1월 1일 새벽 해돋이까지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축제중 하나로 1998년부터 시작한 행사이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불려지게 되었으며 바다와 인접한 풍광이 아름답고 정동진역은 전국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어 동해안 최고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며 19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졌다. 정동진 모래시계는 지름이 8.06m, 폭이 3.20m,

무게가 40톤에 달하며 들어간 모래의 무게만 해도 8톤으로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다. 정동진 모래시계는 허리가 잘록한 호리병박 모양으로 둥근 유리그릇은 시간의 무한성과 동해의 태양을 상징하며, 평행선의 기차레일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정동진은 1999년에는 포항 호미곶, 부산 해운대, 서울 남산, 울산과 함께 전국 5곳의 새천년 해돋이 행사 개최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해돋이 명소다. 정동진 해돋이 축제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관광객 노래자랑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공연, 모래시계 회전식, 새해 소망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정동진에서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함께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비한 자연과 역사이팅이 만나는 곳! 무릉별 유천지

무릉별 유천지는 1968년 동해시에 문을 연 쌍용C&E가 석회석을 채광하던 곳으로 지난 40년간 채광 작업을 마치고 다양한 체험시설과 2개의 에메랄드 빛 호수를 품은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무릉별유천지는 무릉계곡 암각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로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웅장한 석회석 절개면과 석회석을 채광한 자리에 형성된 에메랄드빛 청옥호와 금곡호는 그 의미를 더욱 잘 보여준다.

무릉별유천지는 집라인, 알파인코스터,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스카이 글라이더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로 최대 4명이 탑승 가능한 왕복형 글라이딩 놀이기구로 총길이가 777미터에 달하며 125미터 상공을 활강하며 하늘을 나는 듯한 재미와 압박과 호수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최대속도 40km로 레일을 달리는 알파인코스터와 임시관리 도로를 활용한 무동력 카트 오프로드 루지,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도 재미를 더하고 단지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두미르 전망대, 라벤더 정원, 쉼터, 무릉정령 등 각종 이야기가 가미된 부대시설은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인생샷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관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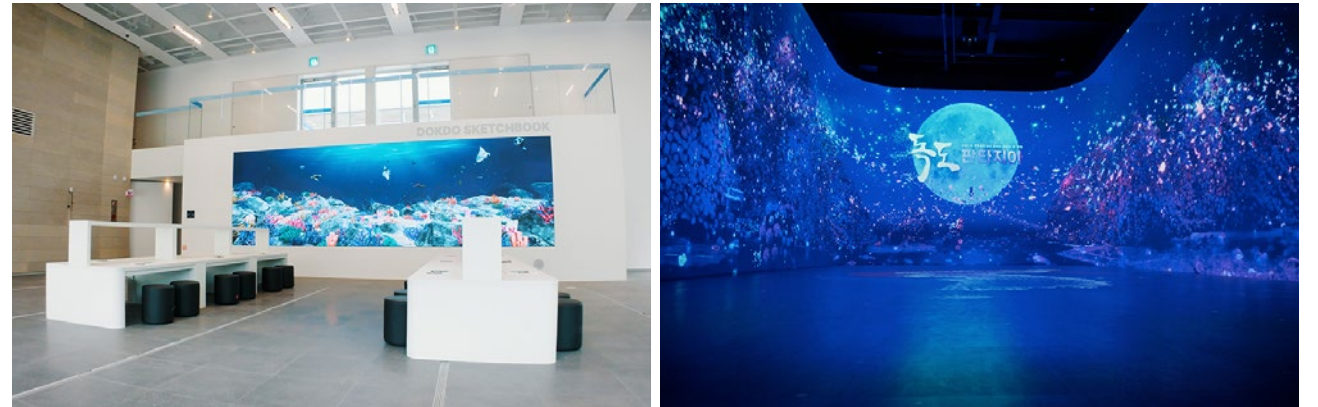
09:00 ~ 18:00 (마지막 입장 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휴관

이용요금

— 일반 : 개인 6,000원 / 단체 4,000원
— 군인 및 어린이 : 개인 3,000 / 단체 2,000원
※ 입장료 중 일정금액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이사부 관에서는 영웅과 독도를 물결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다. 치열한 삼국시대의 국제 정세 속에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켜야 했던 이유와 이사부 장군의 필승적 의지로 동해를 평정하는 영웅의 면모를 담은 4가지의 실감 영상을 4면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독도체험관에서는 미디어 스케치북을 도입하여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독도 바다 속으로 들어가 동해 생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또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독도 풍경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판타지아 세계에서 현실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상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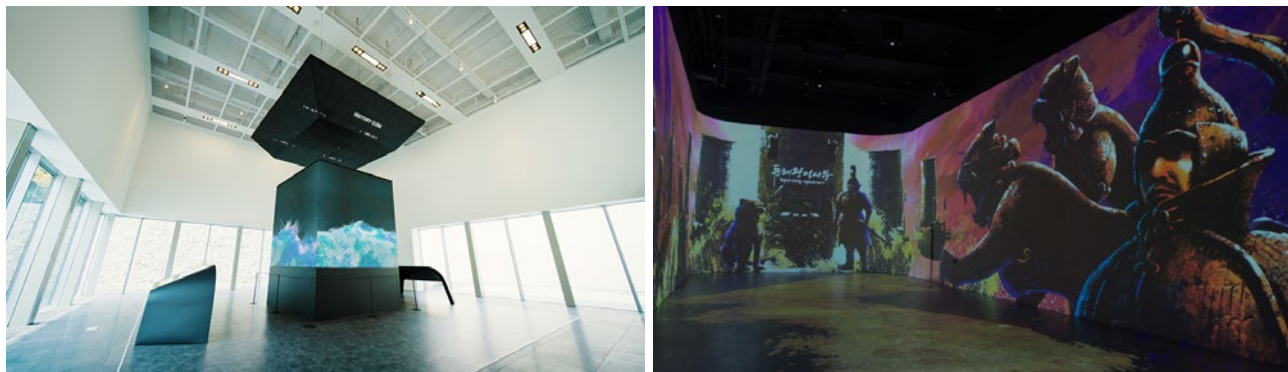
09:00 ~ 18:00 (마지막 입장 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휴관

이용요금

— 일반 : 개인 6,000원 / 단체 4,000원
— 군인 및 어린이 : 개인 3,000 / 단체 2,000원
※ 입장료 중 일정금액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9월 3일 삼척에 이사부독도기념관이 개관했다. 이사부독도기념관은 독도와 동해 수호 중심지인 삼척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담아 관광안내 센터, 이사부관(영토수호 기념관), 독도체험관(독도체험 공간), 라이브러리카페(복합휴게 공간) 총 네 개 동으로 구성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사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지역소멸과 저출산에 대응하는 화천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작은 군단위 지자체인 화천군의 노력과 그로 인한 변화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수많은 중복규제로 공장 말뚝 하나 박기 어렵고, 내 땅에 창고 하나 세우기 어려운 곳으로 제조업 시설은 전무하고,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1개 사단이 해체되며 인구는 어느새 2만3,000명 선을 오르내리는 최전방 지자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천군은 10년 전인 2014년부터 지방의 위기 원인을 불평등한 교육기회,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는 열악한 돌봄 환경이라고 진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만들고,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국내 최초 대학교 등록금 실 납입액 전액과 대학 재학 기간 타 지역 거주 월세에 더해 해외 유명대학 유학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중이다. 부모님의 경제사정으로 해외에 나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해마다 무상으로 해외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진행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경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2012년 91%이던 고교 진학률은 2019년부터 100%를 달성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

또한 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부모에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도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7개 시도를 대표해 돌봄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화천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돌봄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준비하던 사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스피치,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활 속 영어체득 환경 조성을 위해 반별 Two 담임제(원어민 + 한국인)를 운영하여 1일 5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와 생활하며 영어사용 몰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독서&스피치&토론 교육은 개인별 독서, 글쓰기, 스피치, 토론을 통해 문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에 맞는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창의예술, 요리, 악기, 매직테니스, 축구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학습현장이 아닌 단순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편안한 휴식속에서 배움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육 돌봄을 넘어 퍼블릭 케어로

화천군은 그간 일궈낸 교육지원과 돌봄에 더해 온 가족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 수 있는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에 총력을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외지 중학교 졸업생들까지 부모들과 함께 이주해 화천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화천군의 경우 1.26명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국 최고수준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건립 등 기타 복지 역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올해 화천군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덕분에 화천군은 기존의 교육지원과 돌봄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 더 넓은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좌절 대신 무한대로 주어지는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화천이라서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 대신, 화천이라서 가능하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지역소멸과 중앙정부의 역할

화천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행안부 주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고 개관 이후 학부모, 이용 아동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과 사교육비 지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3,000명의 화천군! 1년 예산이 5,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지자체가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일궈낸 성공과 변화는 깊은 울림과 동시에 적지 않은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이러한 전국 소규모 지자체들의 위기탈출을 위한 몸짓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다. 화천군을 비롯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들이 혹시 까다로운 규제로 적극적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낙후된 교통망 개선 등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지 보살필 때다. 배려는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간절하고, 치료는 건강한 사람보다 환자에게 더 절실한 법이다. 조그만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끌어 갈 날을 기대해 본다.





의회소식

-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하반기 출범식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국제 교류 재개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유튜브 개설
-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발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하반기 출범식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김시성)은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선임하며 제11대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하반기 의장에 김시성(속초)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김용복(고성)·박윤미(원주)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어진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한영(태백)의원, △기획행정위원장 문관현(태백)의원, △사회문화위원장 원제용(원주)의원,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인제)의원, △경제산업위원장 박찬홍(춘천)의원, △안전건설위원장 최규만(횡성)의원, △교육위원장 이영욱(홍천)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것으로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국제 교류 재개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돗토리현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양 도 · 현의회간 교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지 4년여

만에 지난 7월 14일 돛토리현 의회 의장단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며 재개되었다.

특히, 이번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2023년 5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에 대한 위로 서한과 성금을 전달하며 상호교류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해온 양 도·현의회간 교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방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5년간 중단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와 토야마현의회간의 교류 또한 토야마현의 도의회 예방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토야마현 및 각 시정촌 의회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간 우호 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튜브 개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을 8월 28일 개설했다.

유튜브는 최근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도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를 통해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좀 더 쉽게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자 개설하게 되었다. 유튜브 채널의 공식 명칭은 쉽고 직관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비전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회기별 주요 순간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뉴스, 생활밀착형 조례에 대한 인터뷰 영상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9월 2일 발표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김왕규 도의원(국민의힘·양구)이 대표로 발표한 건의문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는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민들과 전혀 소통이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밝히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구군민은 정부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을 반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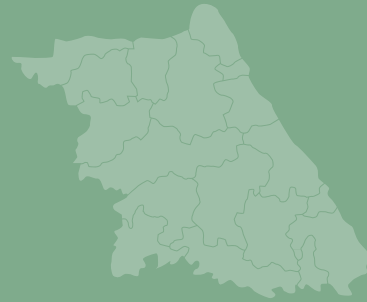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하나,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의 정책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바디텍메드(주) 최의열 대표편
최수아(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지난 20여년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체외진단사업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생명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바디텍메드(주) 최의열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바디텍메드(주) 간단한 기업 소개

우리 회사는 창업한 지 26년 차이며, 98년도 IMF 때 창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림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대학원생들과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초창기에 어려운데요, 특히 대학교에서 창업을 시작한 회사들은 사실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두 번 정도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현재 회사의 직원은 700명 정도 되며, 2023년 매출은 1,350억 원입니다.

그다음 바디텍메드의 특이점은 다른 회사에 비해 외국인 직원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 직원들이 생산직이 아닌 연구직이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대표님이 경상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서울로 대학에 와서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후 테네시 주립대학으로 가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예일대로 가서 PostDoc이라는 박사후 연구원을 한 다음에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사가 춘천에 있는 이유는, 창업을 시작하게 된 한림대학교가 강원도 춘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며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지?

저희가 처음 시작은 26년 전인 98년도에 한림대학교 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만들어졌고 그곳의 공간과 설비를 이용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해서 2010년 졸업해서 2015년 상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졸업한 기업이자 첫 번째로 상장한 회사였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지원도 받았습니다.



바디텍메드의 주요 제품에 대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말초혈을 이용한 각종 질환판단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 제품이고, 혈액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약 13종 정도 있고, 검사 시약이 약 100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검사하는 대부분의 체외진단 관련 시약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9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0퍼센트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제품의 특징은 보통 병원에서 체외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받는 데까지 짧으면 2시간, 오래 걸리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우리 회사의 대다수 제품은 손가락에서 피를 한 방울 뽑아서 환자가 보는 앞에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2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 검사법(POCT)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POCT 분야의 강자인 회사입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글로벌 유통망 구축과 규제 등 현지화에 대한 부분인데 바디텍메드는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잘하신 것 같다. 이와 관련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은?

사실 최근 미국과 한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FDA를 받는다고 하면 약 6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약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25년 전에 시작하여 허가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쉽게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후발 주자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이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면 이미 유통망이 구축된 회사들과 후발 주자 회사들을 상호 협력 맺게 하여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직원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삼으신다고 들었다. 바디텍메드는 직원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문화와 복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직원의 행복을 위한 방법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최고지만 무한적으로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본사가 춘천에 있다보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기술자가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가정에서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해 보게 되었고, 다른 회사들보다 일찍 회사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약 80명, 선생님은 약 20명 정도가 있는데요, 춘천에 사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아이가 1명인 가정보다 2명 이상인 가정이 많습니다. 또, 아이들 대비 선생님 숫자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보다 약 한두 명 더 많다 보니,

선생님들도 덜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육아 지원도 되고, 선생님들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우리 회사의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퇴직을 못 합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8시부터 6시까지 봐주거든요, 특별한 경우 7시까지 봐주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회사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담 직원이 직원들의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에 회사로 데려와 체육이나 영어 등을 가르치고, 부모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꽤 필요하긴 하지만,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배우게 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헬스, 당구 등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피클볼이라는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피클볼이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이 합쳐진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도입한 이유는 남녀노소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달에 한 번씩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에 한 번만 진행하지만,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얼마나 이루신 것 같은지? 향후 계획은?

저희 회사의 최종목표는 글로벌 TOP10 진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TOP10 진단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1조면 가능하였으나 현재 2조로 기준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므로 갈 길이 멀니다. 대신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제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약 20년~25년 정도 뒤쯤 글로벌 TOP10 진단 회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창립 50주년 정도 되면 글로벌 TOP10 진단 회사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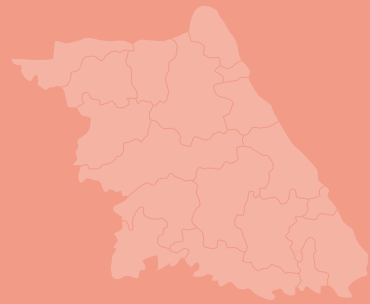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자분들께

저희 회사는 헬스 케어 회사입니다.

많은 분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셔서 몇 가지 건강검진을 조금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질병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당뇨가 만병의 근원이기에 당화혈색소 검사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당화혈색소 검사와 더불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성지방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상관없지만, 중성지방은 높으면 안 됩니다. 중성지방 또한 만병의 근원인데요, 중성지방이 생기는 이유는 고기나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닌,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소와 중성지방 검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분들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포커스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승인제(1988년), 총정원제(1995년), 표준정원제(1996년), 총액인건비제(2007년)를 거쳐 2017년 이후부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구와 정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율성 향상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지방공무원들도 있다. 그나마 인구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수(국의 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기존 제도를 폐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삭제)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제에 비해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총액인건비제와 달리 기준인건비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1~3%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기준인력은 전년도 기준인력+소방인력+국정현안 수요+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효율적 조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는 9~10개의 행정수요변수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 법정민원건수를 가지고 최소자승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10% 반영하고 있다. 행정수요지표는 전통적으로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인구와 면적에다가 경제상황 및 복지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인력 = 전년도 기준인력+소방인력+국정현안 수요+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효율적 조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기준인건비제는 기준인력을 산정할 때 인구수의 급변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는 10%를 반영하고 있는바 행정수요가 급변할 경우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시의 경우 2007년 인구수 40만 명에 총액인건비가 900억 원이었다가 2023년 인구수 50만 명에 기준인건비가 1,900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B시는 2007년 인구수 70만 명에 총액인건비가 1,000억 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인구수 60만 명에 기준인건비가 2,300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적은 기준인건비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 기준인력이 다른 어떤 변수보다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담당자와 면담하면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행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9~10개의 변수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변수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간인구, 65세 이상,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외국인 수의 지표는 인구 지표와 상관관계가 0.9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면적 지표는 농경지 지표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적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간에는 다중공선성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재복 외, 2018). 셋째, 기준인건비제가 총액인건비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1~3%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기준인건비제를 통하여 확대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즉, 2018년 이후부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위반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2023년부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를 부활하였다. 이는 기준인건비제를 통해 확대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총액인건비제의 수준으로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인건비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인건비제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준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완전한 자율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바 과도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 등 다양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점증적인 접근과 혁신적인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점증적인 접근이다. 첫째, 현행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를 측정하는 9~10개의 변수는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이 크게 존재하는바 대표변수로 통폐합하고 새로운 변수를 발굴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준인건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3%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기준인력을 산정할 때 전년도 기준인력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작용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의한 수요증가를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일정 시점에서 전년도 기준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이미 기준인력이 과다하게 초과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년도 기준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혁신적인 접근이다. 혁신적인 접근의 기본 논리는 수행하여야 하는 일의 양과 질이 인력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면 인력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업무량이 감소하면 인력 규모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무의 수에 기반하여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무의 수가 100개이고, 사무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100명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10개의 기능이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10명의 인력이 총원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제 업무량에 기반하여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현재 조직진단을 할 때 1인당 업무량을 산정하고 있다. 유사 또는 동일 방식을 활용하여 총 몇 명의 공무원이 필요한지를 계산하여 산출하자는 것이다. 혁신적인 접근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는 하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기준인건비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의 방향은 점진적 접근과 혁신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의 구축이 필요할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준인건비제를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명주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994년, '정부 재정의 부족을 보완하여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하고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민간투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이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과, 비민투법에 근거한 사업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BTO(수익형)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다.

대상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53개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최근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거친 대표적 사업으로, 케이블카 현대화,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행정복합타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관람차, 도심 곤돌라 사업 등이 있다.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나뉜다. 수익형인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바탕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하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임대형인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이다.

제도변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인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BTO 수정 방식' 등이 도입되고 있다.

추진절차 추진절차는 크게 ①사업계획 수립 또는 사업발굴, 제안서 제출, ②적격성 조사, ③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추진여부 통보, ④사업고시/공고, ⑤사업제안서 제출, ⑥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⑦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⑧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⑨건설 및 운영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추진절차는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인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인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참여자 민간투자사업에는 주무관청, 사업시행자(투자, 건설, 운영 등), 그리고 사업 이용자로 구성된 다양한 참여자가 있다. 이 중 주무관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국가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1 개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 지자체관리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이 해당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지정부터 관리 및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정적 인식도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기 추진된 사업들은 당시 높은 시장금리와 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요구 수익률이 높았으며, 그 결과 사용료가 재정사업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MRG²⁾ 제도의 폐해도 존재했다. 운영 단계에서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용료 인하 및 MRG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사업 시행 조건을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이 있다. 예를들어,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현재의 사용료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이 예측보다 크게 저조하여 사업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³⁾

3.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무관청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획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관리 및 감독, 재정지원 및 리스크 관리,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며, 제도 도입 이후 추진된 전체 민간투자사업 중 약 70%⁴⁾를 차지하고 있다(건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과 추진 의지 및 방식 등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산, 강, 바다가 많은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로나 철도 건설비가 높아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SOC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의지가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 지원 방식과 그 수준도 상이하다. 민간투자사업은 100% 민간자본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재정이 함께 투입되며, 그 대표적 형태가 건설보조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에 차이가 존재한다. 건설보조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지역은 충분한 배후 수요와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적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일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와 역량이 제한적이며, 그 편차도 크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법률, 재무, 금융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 특성상 이러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험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3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단체장 교체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주로 특정 유형의 사업(예: 국토교통부는 도로 및 철도 민자사업을 관할)을 추진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관할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 학교, 주차장, 문화관광 등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구체성이 높고, 이해관계자도 많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이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또는 제안서검토)와 유사하다.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타당성 판단, (2단계) 민간적격성 판단,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타당성 판단 과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비슷하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가 항목과 방법론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⁵⁾에서 제안서검토를 수행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과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과도 관련된다.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심사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개선방향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3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며, 법률, 재무, 금융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일관성과 전문성을 선행하여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정도, 사업

2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정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운영 수입으로 정해놓고, 만약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과 실제 수입 간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1999년 도입)

3 자세한 내용은 경기연구원(2021)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조한다.

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23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853건의 민간투자사업 중 사업주체별 현황은 국가관리사업 254건, 국가관리지자체사업 241건, 지자체사업 358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은 599건으로 건수기준 70%를 차지한다. 국가관리지자체사업은 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주무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5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에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후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7. 4.,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구조 등이 매우 다양하여 국가 사업에 비해 더 많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민투법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수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무관청의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활용이 필요하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관장하지만, 공무원의 순환보직 체계로 인해 장기적인 계약을 관리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개별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경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민간투자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을 갖추고 이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검토는 조사 항목이나 방법론이 유사하여, 중복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중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업을 정확하고 전문적,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비효율적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4년 민간투자사업 제도 초기에는 건설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이나 영업 손실로 인한 파산 등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신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지원할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신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절차가 있다면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국가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는 적으나 사업 유형과 구조가 다양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건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와 성과평가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경기연구원(2021),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등(2023), '경기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개발 연구'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0월호는 '강원특별자치도'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김진태 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 '바이오」,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사례』에서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제교류 재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튜브 개설」,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발표」를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20여년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체외진단사업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생명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바디텍메드(주) 최의열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11월호는 '전라남도'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